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광역모집과 학생배정의 문제

- 종교학과의 경우를 중심으로)

김 종 서

目 次

1. 대학 광역모집과 학과배정의 기초 전제
2. 인문대와 이중 잣대의 문제
3. 학과 배정과 학문적 정의
4. 학과배정의 구체적 기준

1. 대학 광역모집과 학과배정의 기초 전제

인문대의 학생 광역모집은 우리 모두가 오래 고민해온 문제다. 이 제도는 인문대가 스스로 택한 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작년 2001학년도 신입생 중 역사와 사상 분야의 7개학과 '인문계학과군'이 형성되었다. 또 올해 2002학년도 신입생이 인문대 15개학과 전체로 '광역모집단위'를 구성하게 되었다. 모두 인문대 자체가 원했기보다는 교육부와 학교 본부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에까지 '학과별 모집 불가'를 명시하였다. 그리고 교육부로부터 소위 'BK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대학 본

* 서울대 교수, 종교학

- 1) 이 글은 본래 2002년 2월 15일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에서 주관한 학사협의회에서 발표된 것이다. 오늘날 종교학 그리고 종교학과의 한국의 대학 교육 속에서 그리고 서울대학교와 인문대학 내 다른 학문 분과들과 더불어 차지하고 있는 학문적·체제적 위상을 파악하고 또 훗날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될까 하여 실는다.

부는 구조조정의 일환으로서 이 제도를 몰아 부쳤었다.

물론 인문대 내에서도 학제적 연구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광역모집안에 일부 찬성도 있었다. 그러나 반대도 또한 만만치 않았다. 그래서 결국 의견의 일치를 못 보아 능동적인 대처를 할 수 없었다고 생각된다. 반대의 가장 핵심 이유는 역시 나중에 학과배정에서 학생들의 학과편중 성향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고 본다. 즉 신입생의 학과배정은 광역모집 제도의 중심 쟁점을 구성해온 셈이다.

다시 말해서, 방치된 광역모집 제도하에서 이러한 신입생의 학과배정 문제가 이른바 '인기 학과'와 '비 인기 학과'의 구분을 더욱 벌려 놓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 그것은 학생정원 문제와 연계되고 학생이 줄어들면 전공강의가 운영이 안 된다. 따라서 교수정원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아예 학과 폐쇄를 초래하게 되는 경우도 이른바 학부제를 실시한 다른 학교들에서 종종 있었다. 그렇기에 인문대 내의 많은 교수들이 전통적인 인문대의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걱정해온 것이다. 또 학부제로 인한 학과의 폐쇄는 무엇보다도 그 학문분야의 중대한 사회적 상실이라 하겠다.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일부 매스컴에서 학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그저 '밥 그릇 싸움' 정도로 매도해버린 것은 매우 서글픈 일이었다.

아무튼 광역모집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다. 벌써 광역모집으로 올해 신입생이 선발되었다. 더 이상 교육부와 대학 본부만 탓하고 학과별모집을 하겠다고 해도 소용없는 일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히려 이 광역모집 제도 안에서 어떻게 인문학의 학문적 특성을 잘 살려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즉 학문적 논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학문 외적인 논리는 철저히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나중에 학생배정에도 학문 외적 이유로 인한 소위 일시적인 '인기학과'를 우대해서는 안 된다. 또 대학 본부의 부스러기 연구비 미끼에 걸려 경제논리나 상황논리에 의한 학과(정원) 구조조정 등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도대체 인문학이 무엇인가? 인간으로 살아가는 가장 원초적인 길이요, 그래서 인간다워지는 것을 배움 아니던가? 적어도 인문학은 실용성의 노예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창의력의 원천이요, 또 좁은 현실의 눈을 초월하여 사물을 새롭게 관조할 수 있는 상상력의 근원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2. 인문대와 이중 잣대의 문제

학문 외적인 논리에 의해 원하지 않는 광역모집 제도가 강요된 현 상황은 한마디로 인문대의 위기다. 그런데 기왕에 닥친 위기는 푸념만 할 수는 없고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인문대 각 학과가 따로 따로 살길을 찾을 것이 아니라, 전체가 하나가 되어 공동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²⁾

지진이 났을 때 지진 그 자체보다도 교실의 학생들이 너도나도 무질서하게 먼저 피하려다 연쇄적으로 넘어져 더 큰 사고를 자초한 경우를 들은 적이 있다. 인문학의 위기도 교육부나 대학 본부의 잘못된 정책뿐만이 아니라, 인문대의 우리 모두가 각자만 살려고 이기적인 입장을 내세워 사태가 더욱 악화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신입생 학과배정에서도 특정 학과를 일시적으로 학생들이 선호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과만 소위 ‘힘있는 과’라고 자처하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오히려 학생정원을 늘릴 기회로 여긴다면 정말 모두가 힘든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재난을 피해 자기만 살겠다고 넘어진 사람을 짓밟고 혼자만 나가다 보면 결국 이수라장이 되어 모두가 다치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도대체 학문 세계에 ‘힘있는 학문’과 ‘힘없는 학문’이 어디 있는가? 인문대 안에 ‘힘있는 과’와 ‘힘없는 과’의 구분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적어도 대학 본부의 소위 ‘힘있는 대학’과 ‘힘없는 대학’의 구분을 거부할 논리적 근거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법대, 경영대, 공대 같은 교내 다른 대학들과의 학생 및 교수정원 문제에서는 사회적 요구나 학생들의 선호가 무슨 대수이냐고 하면서 우리는 학문의 기본을 말해왔다. 그러다가 인문대 안에서는 상대적으로 자기 과에 유리하다고 학생들의 희망대로 가능한 배정을 하자는 것은 딴 말을 하는 셈이다. 이것은 분명히 이중 잣대다.

2) 이 점은 광역모집 뿐 아니라, 교수정원 문제에서도 깊이 인문대 스스로가 반성해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근자에 인문대 몇몇과의 정년퇴임 하신 교수님들의 자리를 대학 본부는 멋대로 유보하거나, 아예 없애거나, 다른 과 교수정원이라며 일방적으로 조정해서 공고를 내 버렸다. 전에 없던 일이다. 인문대의 자율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다. 이러한 중대한 문제는 해당 학과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인문대 전체가 하나가 되어 철저히 대처해야 한다. 특히 인문대의 운명은 인문대 스스로가 모든 학과의 보편적인 합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고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법학 및 경제학을 거쳐서 만년에 그 양자의 근원이라고 생각한 세계 종교윤리를 탐구했던 막스 베버(M. Weber)의 유대교 비판은 이런 점에서 매우 교훈적이다. 즉 유대 민족은 세계 최고의 정신적 유산과 부를 자랑하지만 결국 게토(Ghetto)에 갇혀 더 큰 세상에서 주도적 위치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고 한다. 그 까닭은 선민(選民)사상에서 나오는 이종적 도덕 때문에 동포와 타민족에 차별적인 윤리기준을 적용하여 보편 윤리를 개발해내지 못한 탓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이종 잣대는 현재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잘 인식되지 못한다는 점이 더욱 문제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아메리칸 인디안 속담에는 “남 얘기를 하려거든 그 사람의 모카신(moccasin)을 신고 십리를 뛰어 본 다음에 하라”는 말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돌이켜 보건대, 작년에 시행된 역사와 사상 분야의 7개 학과로 구성된 인문계학과군에 종교학과의 참여는 매우 힘든 결단에서 비롯된 모험이었다. 어문계 학과들은 개별 모집을 하였고, 종교학과도 그렇게 끝까지 버텨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다른 역사와 사상 분야 학과들과의 깊은 공조 관계 속에서 종교학이 심화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오직 순수 학문적 이유에서만 참여한 셈이기 때문이다.

물론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상과 문화’ 등 팀 티칭 강의도 하고 하면서 7개학과는 (학생들 생각은 어떠하든) 인문학 상호간 학제적 운영에 일정하게 의미 있는 시도를 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종교학과는 작년 초에 정한 올해 신입생 모집에서 전공예약제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학생 배정 문제에서는 학과들 간의 벽을 철저히 허물고 상호 협력한다는 애당초 약속을 너무 쉽게 믿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작년 봄 인문계학과군 학과배정을 위한 회의에서 현 정원이 20명인 어느 과가 “우리는 학생들이 너무 많이 지망하지만 (다른 과를 배려해서) 한 50명 정도만 받았으면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 어느 과는 “전공예약제에 참여 안 했으면 학생들이 자유 선택하게 한다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뜻이 아닌가” 하는 묘한 논리가 그 학과 회의에서 제기되었다고도 하였다. 학과 서로 따질 것 없이 인문계학과군 전체를 그저 인문학 전공으로 졸업시키자는 등의 초창기 장밋빛 제안들은 각 학과들의 정원 채기기에 어느새 논의로 사라졌다. 우여곡절 끝에 각 학과가 현 정원의 20%까지만 더 뽑을 수 있다는 안(案)에 일단 합의를 본 상태다. 소위 ‘힘있는 학과’로서는 상당히 양보하고 이른바 ‘힘없는 과’를 엄청나게 배려한 결과다. 그런데 작년 인문

계학과군 학생 총 160명 중 올해 재수하거나 내년 학과배정 전까지 전과 등을 해서 빠져나가는 학생이 적어도 수십 명은 될 것이다. 그리고 남은 학생 가운데 20%씩을 더 가져가고 나면 과연 몇 명이 더 남겠는가?³⁾

그러나 이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현재 인문계학과군 학생들은 학과 배정에서 정원철폐를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학장실 앞에 페인트로 마구 흩뿌린 그들의 섬뜩한 구호들을 보며 교육에 몸담고 있다는 것 자체에 연민을 느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 소위 학생대표의 방문을 받았다. 와서 대뜸 하는 말이 “왜 다른 과에서는 다들 ‘우리는 반대 안 한다’고 하는데 유독 종교학과만 정원 철폐를 반대합니까? 그러다고 누가 종교학과 잡니까?”하는 것이었다. 학생을 닦하기에 앞서 그렇게 다짐했던 인문계학과군의 상호협조가 한낱 환상이 되는 것이 안타까웠다. 또 종교학과는 이 풍진 속

3)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인문대 학생 수의 변화 추이는 인문대 각 학과들간의 소위 신입생 배정논의에 또 하나 심사숙고할 요건이라고 본다.

우선 대학 구조조정의 결과로 올해 2002학년도 신입생 입학 정원은 작년 372명에 비해 24명이나 줄어든 348명이다. 둘째로 작년의 경우 인문대 재학 중 다시 입시를 쳐서 타교(또는 교내 타 대학)로 가는 등의 이유로 자퇴 제적한 학생 수는 29명이다. 올해는 아직 파악할 수 없으나 아마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로 올해 2월 인문대에서 교내 타 대학(법대 22명, 경영대 10명, 사회대 8명)으로 전과를 한 학생은 총 40명 (cf. 작년 2001학년도에는 27명)이 넘는다. 이외에도 올해 인문대에 합격을 포기하고 미등록한 학생, 군입대,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학 및 자퇴생이나 이름만 걸어놓고 고시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물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빼고도 위의 공식적으로 줄어드는 학생 수만도 현재 신입생 정원의 26.7%인 셈이다. 그러니까 각 학과는 올해 신입생들이 2학년 말 학과배정을 할 때쯤 작년에 비해 정원의 대략 4분의 1 이상이 감소한다고 보면 된다.

이것을 작년 인문계학과군의 학생 총수 160명에 적용해 보면 무려 40명이 줄어드는 것이다. 더 쉽게 말하자면 정원대로만 받아도 현재 7개학과 중 정원 20명인 학과 두 곳은 전혀 학생을 받지 못한다는 어렵게산이다. 그러니까 인문계학과군이 진정 하나의 공동체이자면 소속 7개학과가 모두 구조조정이 되기 전 옛날 정원의 4분의 1 씩을 오히려 줄여 뽑아야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제대로 공유하는 셈이다. 그런데 이 지경에 정원의 20%(즉 나머지 120명 중 20명)를 더 늘려 받겠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힘있는 과’들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정원 20명인 학과 또 하나가 학생을 전혀 못 받는다는 말이다. 즉 7개학과 정원 중 4개학과 정원만 남는다. 물론 학생들의 선호가 달라서 이와 같은 극단적 편중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아마도 두 세 학과로의 집중이 나머지 너댓과에 그만큼 좌절과 인내를 강요할 것임은 분명하다.

아무튼 이런 인문대 학생 수 자체의 감소는 허가 갈수록 점차 더 심해질 것이고, 전공을 하는 학생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셈이다. 이 판국에 우리끼리 정원을 놓고 따따부따 논쟁을 벌인다는 자체가 정말 한심할 뿐이다. 사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오히려 인문대 전체가 하나가 되어 교내 다른 대학들과의 상관관계를 염두에 두고 학생배정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세를 너무나도 모르는 숙맥이었구나 그제서야 반성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내년 입시에 기필코 전공예약제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하기는 인문계학과군의 학생배정을 위한 회의 때 한 교수도 “어차피 20%로까지만 더 뽑을 수 있게 낮추어도 종교학과에 상관이 있겠는가? 공연히 다른 학과에 갈 학생만 막는 게 아닌가?”라고 한 적이 있다. 인문대 안에서 가장 가깝다는 학문 분야에서조차 이런 상황이 되니 실용주의를 앞세운 교육부나 대학 본부를 전혀 탓할 때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되었다. 과연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교내 타 대학들이 정원을 늘리겠다고 인문대 학생정원을 빼앗아 가려하는 판에 우리는 무어라 해야 하겠는가? “어차피 인문대 가면 전공합니까? 대다수가 고시준비들이나 하는데 공연히 학생들만 원하지 않는 공부를 하게 붙드는 것 아닙니까?”하고 묻는다면 말이다.

3. 학과 배정과 학문적 정의

그렇다고 신입생 학과배정에서 무턱대고 ‘힘없는 학과’에 값싼 동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늘 그래왔듯이 각 학과가 그저 막연히 사이 좋게 협조를 해야 한다는 이상적 논의는 공허할 뿐이다. 학생들은 더 원하지만 자체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10% 또는 20%까지만 학생을 더 받겠다는 억지 선심(?)도 또 맹목적일 뿐이다. 따라서 모두 실제로는 무의미하다.

그 보다는 오히려 일관된 순수 학문적 논리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그것을 실현하고자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때때로 사안(case)별로 이해 당사자끼리 흥정하지 말고 하나의 정당한 원칙을 오래 전에 미리 세워놓고 실천 하자는 얘기가. 그러니까 (지진 같은) 재난 상황에서 정작 꼭 필요한 것은 그저 옆 사람을 잠시 붙들어 주는 게 아니다. 그 보다는 모두를 위한 하나의 대피 수칙을 정해놓고 그것에 따라 질서 있게 행동하게 해야 효과적이라는 말이다. 마찬가지로 교육부든 대학 본부든 외부로부터의 시련을 잘 극복해내려면 인문대 모든과는 하나가 되어 공동 대처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가 되려면 인문대는 하나의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말이다.

즉 신입생 학과배정도 인문대 구성원 전체가 합의할 수 있는 하나의 원칙을 만들어서 실천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보편 타당한 것이어야 한다. 물론 무조건 다 똑 같이 배정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제대

로 된 **학문적 정의(正義)**가 실현되려면 다수결만으로는 안 된다. 우리는 대학 본부의 학장회의가 학문적 중심성은 외면한 채 다수결로만 모든 일을 결정하고, 공대가 수적으로만 우세하여 학교운영을 주도하는 것을 비판해 오지 않았던가?

우리가 소위 학문하는 지성인들로서 힘이 아니라 순수 학문적 정의를 실천하려면, 적어도 인문대의 합의 도출과정은 보편적 이성에 근거한 (루소 Rousseau적) '**일반의사(一般意思)**'가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한 마을의 10 가구 중 작년 예산으로 9 가구만 전기를 끌어왔다면, 올해의 예산은 당연히 우선 작년에 남은 1 가구에 전기를 끌어다 주고 나머지로 새로운 사업을 계획해야 한다. 1 가구는 전기도 못 끌어왔는데 (그 사정은 무시하고) 올해 예산은 공동 텔레비전 안테나를 세우는데 쓰자고 다수결로 결정을 해버리면 그것은 횡포다. 같은 인문대학 안에 있으면서 어느 과는 기본적인 유지조차 어렵다. 그런데 다른 과들이 자신들에게만 유리한 기준을 세워 놓고 현재 보다 더 많이 정원을 늘리겠다고 다수결로 결정을 해버렸다고 하자.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일반의사 즉 총의(總意)가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학문적 정의에 입각한 일반의사로부터 도출된 인문대의 기준은 인문대 자체뿐만이 아니라 서울대 전체의 기준으로도 제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즉 직업인을 만드는 한 가지 전문교육이 아니라 다양한 기초(교양)교육을 중시하라고 대학 전체에 인문대는 주장해왔다. 그렇다면 학문 외적인 힘이나 한가지 전문지식이 아니라 창의력과 인간적 의미를 탐구하는 인문학적 기초가 훈련되는 인문대 각과의 **다양한 학문적** 근본을 중시하는 기준이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4. 학과배정의 구체적 기준

위에서 제시된 몇 가지 원칙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언적인 약속보다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신입생의 학과배정 문제는 각 학과의 정원을 어떤 방식으로 정하는가 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요구되는 것이다. 사실 정원 문제만 확실해 진다면 한 때 쟁점이 되어온 학과 배정을 언제 하는가(1학년말인가? 2학년말인가?)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언제가 되든 결국 각 학과에서는 몇 명이 배정되느냐

하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신입생 학과배정에서 학문적 논리에 근거하여 이중 잣대를 피하고 인문대의 일반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정원의 조정기준은 도대체 무엇일까? 물론 학생들의 지망이나 사회적 수요, 대학원 진학을 등도 아주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것은 현행 '인문계학과군 학사관리규정(제 18조: 각 학과는 **교육여건과 학과군 내 학문 분야간의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하여 학과전공 학생 정원을 정한다. 2000년 11월 21일)'의 기준들이라고 본다. 물론 이 기준을 규정만 해놓았지 현재 인문계학과군의 실제 학생배정은 그 정신을 전혀 잘 살리지 못했다고 본다. 앞서 지적했듯이 종교학과는 정원보다 20%까지 더 뽑을 수 있다는 현재의 합의사항을 일반의사로 여기지 않는다. 다수결의 결과일 뿐이다.

그러나 '교육여건'과 '균형 발전'의 기준은 일정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우선 균형 발전은 적어도 어느 과가 정원 배정에서 현재 상황보다 현저하게 불리해지는 것은 안 된다는 뜻으로 여겨진다. 다시 말해서, '균형의 축'은 **현재의 정원**이다. 사실 현재 인문대 각과의 정원은 오랜 세월을 거쳐서 정착된 숫자다. 일시적인 이유로 이것을 쉽게 흔들어서는 안 된다. 특히 일반의사에 의한 합의가 도출되지 못했을 경우는 현 정원을 유지해야 하고, 정원의 변화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런 경우에 아마도 소위 인기학과는 정원을 늘릴 기회를 놓쳤다고 억울하게 여길지도 모른다. 또 학생들이 오겠다는 데 어떻게 오지 말라고 막는다는 반론도 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이 인문대의 어느 과도 대학원 진학이나 전공분야 진출을 생각해보면 정원이 모자라다는 말을 감히 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인기학과는 정원을 늘리기보다는 우수한 학생을 우선적으로 뽑을 수 있다는 점만도 큰 혜택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균형 발전의 기준을 지킬 의사만 있다면 전공탐색 과목 등에서 학점 등을 심하게 통제하여 꼭 받을 학생만을 남기고 다른 학생들은 다른 전공을 빨리 찾아갈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 전공미확정(undeclared)으로 학생을 받는 해외 대학들에서도 경제학 분야나 의대준비(pre-medical) 과 정들은 바로 그렇게 하고 있다. 사실 인문대 안의 각 과는 아직도 해당분야에서 우리 나라 최고의 학문 수준을 자랑한다고 본다. 주변의 다른 과들이 최고 수준을 계속 유지해 주어야 인문대 전체의 학문적 수준이 유지되고 결국 자기 과의 학문적 지위도 더욱 확고히 보장된다고 할 것이다.

두 번째, '교육여건'의 기준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이것도 여

러 측면에서 개입변수를 고려할 수 있을 지 모른다. 그러나 역시 각 학과에서 교수 1인당 과연 얼마나 많은 학생을 돌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본다. 즉 '여건의 축'은 교수 1인당 평균 수강생 수다. 왜냐하면 교육이란 다른 무엇보다도 교수와 학생간에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물론 대학원과목이나 전공과목 수강생의 숫자 및 교양과목 수강생까지가 다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좀더 합리적으로 하자면 대학원과목이나 전공과목은 교양과목에 비해 가중치를 약간 달리 할 수도 있다.

아무튼 편의상 모든 인문대 과목 수강생을 같은 비중으로 처리했을 때, 2001학년도 인문대에서 개설한 교과목에 수강한 대학전체 학생의 수는 약한 학기에 3만 명 정도씩으로 1년간 총 약 6만 여명 정도다. 그러니까 인문대 교수 전체 인원 150여명으로 나누어 보면 교수 1인당 평균 1년에 400명 정도의 수강생을 돌보고 있는 셈이다.⁴⁾ 그러나 이러한 교수 1인당 수강생 수를 놓고 보면 인문대 내에는 200명도 안 되는 학과에서부터 무려 1800 명이 넘는 학과에 이르기까지 아주 격차가 심하다.

다시 말해서, 교수 숫자는 몇 명 안 되는데 수강생 수는 너무 많은 과들이 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이런 학과들은 교육여건이 열악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런 학과들은 교육여건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학생정원을 절대로 더 늘려서는 안 된다. 더욱 상황이 악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렇게 너무 많은 경우에는 적은 학과에 학생 정원을 양보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그 학과 교수들의 교육활동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교육여건을 평준화하기 위해서, 나중에 교수충원을 할 때는 교수 숫자에 비해서 수강생 수가 현저히 많은 학과부터 우선권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적어도 인문대가 하나다라고 여기고, 인문대에 속한 학과들은 거의 비슷한 교육여건을 누려야 한다는 전제가 옳다면, 교수 숫자에 비해 수강생 수가 평균보다 적은 학과들은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나은 셈이다. 특히 교수대 수강생 수의 비율이 아주 작은 학과들은 학생정원은

4) 물론 여기에는 각 학과마다 시간 강사의 수는 따로 계산하지 않았다. 실제로 대학 평가에서는 전임교수의 수만 따지고, 시간 강사들조차도 관리하는데 전임교수들이 간접적으로 상당한 노력을 하는 경우가 많다. 또 점차 시간 강사를 대폭 줄여 나가 교과목 수도 줄어나간다는 것이 대학 본부의 입장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각 학과의 전임교수 중심으로 교육여건을 계상해야 더 타당할 것이다. 참고적으로 2001학년도 인문대 교수 1인당 수강생 수의 평균값(Mean)은 405이고 중간값(Median)은 313이다.

더 받는 대신에 교수정원은 교육여건이 열악한 학과에 양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교수 숫자에 비해 수강생 수가 현저히 많은 학과나 교수 숫자에 비해 수강생 수가 현저히 적은 학과 어느 쪽이든 모두 학생정원과 교수정원을 동시에 늘리려고 한다면 이것은 교육여건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분명히 이중 잣대를 제시하는 셈이다. 이러한 학과들은 인문대가 하나의 학문공동체로서 통문화적 인문학을 형성해나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학과들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교육여건의 기준은 인문대학이 서울대 내의 위상에서도 고려해야 할 요건이다. 즉 인문대 교수들은 교내 다른 대학 교수들보다 현저하게 많은 수강생 수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더 많은 학생 정원을 요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교수총원은 다른 대학보다 우선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이중 잣대가 아닌 일관된 순수 학문적 정의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학문 세계에 급격한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학문적 정의 실현을 위한 다른 가능한 기준들은 없는 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또 시간을 두고 학과들의 특수 사정 등도 합당한 지 공개적으로 따져보아야 한다. 그리하여 전체적인 합의에 의해 도출된 일반의사를 존중하면서 점차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은 중요하다. 다만 변화의 중심 방향만은 교육여건과 균형 발전의 기준을 항상 기본으로 해야 한다는 말이다.

요컨대 70여 년 긴 역사를 둘러보았을 때 인문대는 지금 기로에 서 있다. 광역모집 등 대 내외적 역동성이 변화를 이렇게 심하게 몰아 부친 적도 별로 없다. 그런데 변화는 늘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래서 두렵다. 특히 그 고통이 힘에 의해 특정 학과에만 강요된다면 참기 정말 힘들다. 그것이 인문대 전체의 학문적 대의(大義)를 위해 거둬나고자 같이 하는 희생이라면 그나마 감내할 만한 것이다.